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6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2월 17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썩을대로 썩은 검찰에게 노조파괴 수사 못맡겨

검찰 어디까지 썩었나

검찰이 민낯 정도가 아니라 알몸까지 드러냈다. 노조파괴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줘 구설수에 올랐던 검찰이 간첩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한 것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권 1년동안 각종 공안사건을 연속해서 터뜨리며 공안몰이에 앞장서왔던 검찰의 치부가 완전히 까발려졌다. 검찰의 신뢰는 끝모르고 추락하고 있고, 그동안 검찰이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촉구하거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노조파괴 수사에도 특검 도입해야

작년 2월 국정원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이라는 사건을 터뜨렸다. 탈북자 신분으로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확보해 검찰에 넘겨준 핵심증거는 간첩으로 지목된 유씨의 출입국 기록이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조문서라고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국제적 망신임과 동시에 사법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사실 검찰이 정권에 충성경쟁을 펼치면서 공안사건을 터뜨릴 때부터 노동사건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란 것은 예상됐다. 그래도 이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그런데 간첩사건을 만들려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어떤 반응을 보여야할지 조차 난감한 상황이다. 더 이상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었다. 고양이에게 생선 잘 지키라고 얘기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국회는 고통받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라!

이제 노동자들은 검찰을 전혀 믿을 수 없다. 아니, 어떤 국민도 검찰을 믿지 못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파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는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한다. 검찰이 망쳐놓은 사법정의를 국회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유성지회는 13일 특검 촉구 기자회견 후 21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더 이상은 못믿겠다! 경찰은 손떼라!

노조파괴 사건 특검 도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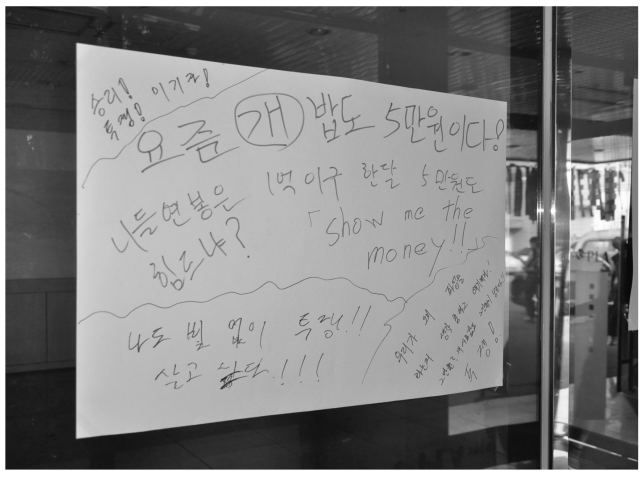
무능한 경영진은 항상 노동자에게 떠넘긴다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경영진은 두가지 부류가 있다. 애초부터 목적이 적당히 이윤을 빼먹고 먹튀하려던 경우이거나, 정말로 무능한 경우다. PLA 경영진은 어느 부류일까?

PLA가 요즘 시끄럽다. 시끄럽다기 보단 뒤숭숭하다고 해야 더 맞는 표현일 것 같다. 설 연휴가 끝난 뒤, 사측이 휴업 및 폐업을 노사협의로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13일 노사협의를 통해 교섭을 전환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경영진들은 노조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웠는데 노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어디나 자본의 변명은 똑같다. 콜텍도 쌍용자동차도 전부 그랬다.

PLA자본은 지난해 추석 휴가비를 비롯해 상여금을 체불하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 경영상황이 어려우면 해결책을 고민해야할 경영진이 노조 탓만 하고 있으니 해결될리 만무하다. 그동안 쓸데없는 광구개발사업으로 회사 말아먹더니 이제는 노조 때문에 어렵다며 휴, 폐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윤이 나면 전부 자본만 배불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노동자 정리해고나 휴, 폐업만 떠들어대는 자본의 행패를 그냥 두고 볼 순 없다.

지부, 지회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함께 공동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본 멋대로 하게 놔두진 않을 것이다.



〈작년 파업투쟁 당시 조합원들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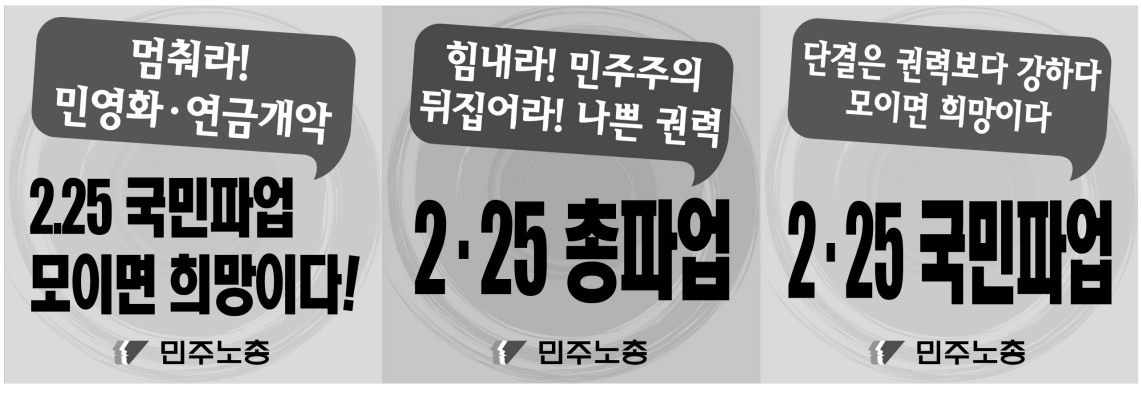
2.25 총파업 찬반투표 17일~19일 실시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금속노조가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17일부터 19일까지 각 사업장별로 투표를 진행하고 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개표한 뒤, 노조 차원에서 전체 종합된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년간 박근혜 정권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지금까지 의심받고 있고, 공약은 대부분 파기되거나 후퇴했다. 갖가지 조작된 공안사건으로 사회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검찰의 공안사건 조작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노동권을 비롯해 국민 기본권이 부정되는 상황을 넘어 아예 민주주의 근간 자체가 뒤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추악한 행태를 폭로하고 확실한 타격을 주기 위해선 민주노총이 제대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그 포문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를 넘어 다양한 단위들과 함께 국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억눌려온 민중들이 폭발적으로 뛰쳐나올 수 있는 총파업 투쟁을 만들고 있다.

17일부터 진행될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이 나온다면 총파업 투쟁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에 항상 앞장서 왔던 금속노조가 압도적인 찬성율을 기록한다면 타 산별 연맹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투쟁 국민들은 정당성 인정했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투쟁으로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부산양산지부 문철상 전 지부장, 정홍형 조직부장, 한진중공업지회 차해도, 박성호, 김병철 조합원에 대한 재판이 2월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노동 현안으로는 첫 국민참여재판이다.

재판부와 국민 배심원단은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30일 김 지도위원 등이 800여명과 함께 최씨의 관을 영도조선소 정문 앞 분향소로 옮기려고 사전에 경찰에 신고한 거리행진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경찰이 차벽으로 막고 저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집회 참가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한진중공업 정문에서 600여m 떨어진 서문의 쪽문을 부수고 25일 동안 공장 안에서 농성을 벌인 것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많은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에 대해 공권력은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막아섰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2.14 대보름맞이 유성 시민선전전>


<2.14 총파업 조직 현장순회_대한이연>



<2.14 총파업 현장순회_한라비스테온공조>


<2.14 총파업 현장순회_한라비스테온공조>